

2013. 3. 26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3년 3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

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
- 본 보도자료는 KDI가 발행하는 경제·사회 분야 학술지인 「한국개발연구」 제35권 제1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·요약한 것입니다.
-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, KDI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연구의 목적

-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(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)를 국가별로 비교하고,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.
-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,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.
-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,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.
-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.

-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임.
 - 각 연령별로 인구수를 곱하여 모든 연령별 자원을 더하면 국민계정의 총량값과 일치하도록 회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40개 국가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(본 논문에서는 33개 국가의 자료를 비교 검토함).
 - 각 회계부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와 정부가 노년층 및 유년층을 부양하는데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지 판별이 가능함.
 - 본 논문은 한국의 2000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과 차이가 있음. 따라서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공공부문 부담의 변화추이를 같이 살펴 봄.

2.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

-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정도는 후생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, 연구결과는 국가간 연령별 소비패턴의 차이가 교육비와 건강관련 비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양상을 보여줌.
 -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, 한국의 경우 유년층에 대한 교육비가 매우 커서 유년층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높음.
 - 반면 한국의 노년층 소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는데 이는 의료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주요 기인함.
 - 이런 점에 있어 한국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.
-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소비로 나누어 봤을 때,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소비가 적었음.
 - 즉 유년층에 대한 교육비가 매우 큰 것은 민간 교육비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

○ 노년층의 소비가 적은 것은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의료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기 때문인데, 전반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아 가구부담의 의료소비도 낮은 수준임.

□ 이렇게 낮았던 공공소비 의존률은 저축률과 개인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각종 리스크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.

○ 한국의 노년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은 반면 민간부문과 저축 및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는데, 이는 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.

○ 하지만 높은 민간소비 의존율, 특히 높은 사교육비는 각종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음.

- 개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의 부양체계를 잠식함.

- 출산율을 낮추어 고령화를 급속히 진행시킴.

- 유년층에 소득계층 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움.

□ 하지만, 낮았던 공공소비 의존율과 의료비는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를 노정함. 예를 들어 보면

○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보험 수혜액은 매년 15%씩 상승

○ 동기간 동안 연금 혜택은 매년 9%씩 상승

○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부문의 의료비용 부담액은 국내총생산의 1.4%에서 3.5%로 증가했음.

- 빠른 고령화가 미친 기여도는 10% 내로 미미한 반면, 대부분은 순수한 의료비용 증가 및 수요 증가에 기인함.

○ 이처럼 급증하는 공공소비 의존도는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화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음.

- 가족부양체제도 2000년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어, 결국 미래 한국 노년층의 부양체제는 노동시장, 공공부문, 개인의 저축 및 자산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하지만 노년층의 노동시장을 통한 자원마련은 한국의 경우 한계가 있음.
 - 한국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반면 노동소득은 적음.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노년층의 노동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시간당 소득이 매우 적다는 반증임.
 - 노동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경우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효과만 있음.
 - 즉 노년층의 노동생산성이나 근로에 대한 보상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년층의 노동증가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.
-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 노년층의 부양체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저축 및 자산이 담당하여야 하는 문제로 귀결됨.
 - 사교육비가 높은 것은 노년층의 부양체제가 취약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.
 - 노년층의 부양체제를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의존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에 맡겨두는 것 모두 리스크가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재정, 부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 부양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.

❖ 문의: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 (e-mail: leesang@hawaii.edu, office: 1-808-956-8590)